반전 · 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

다함께

2007년 1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www.alltogether.or.kr | atgmail@nate.com

현대차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 투쟁은 정당하다

1월 3일 현대차 울산공장 시무식에서 벌어진 노사 충돌 이후, 기성 언론들은 일제히 개떼처럼 현대차 노조를 비난 · 공격하고 있다. 늘 그렇듯이 "폭력" "과격" 성향의 현대차 노조가 "배부른 투정"을 한다는 식이다. 현대차 노조를 비난하는 '개떼'들 속에 합세하며 열우당 김근태는 "환율보다 더 무서운 노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의 원인과 책임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성과급 50퍼센트를 떼먹은 사측에 있다.** 조합원 1인당 무려 1백여만 원의 임금 삭감을 당했다. 사장 · 부사장은 스톡옵션으로 2~7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는데 말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지난 연말부터 잔업 · 특근 거부 투쟁을 벌여 왔고 강력한 행동으로 시무식을 무산시켜 버렸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무시한 사측에 대한 통쾌한 일격이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생산 목표를 98퍼센트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꾸준히 참가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순이익을 남겼다. 변호사비만 4백억 원을 쓰고 풀려났다는 비리범 정몽구는 여기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 잔업 · 특근을 하며 고생해 온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그런 성과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마저 거부한다.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개근'한 것도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 파업은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 반대한 것이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등에 앞장서 맞선 것이다.**

이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 뿐 아니라 피억압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 것은 찬양 · 고무받아 마땅한 일이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무릅쓰고 이 같은 정치 파업에 참여했다. 강력한 전면파업이 아니라 미온적 부분파업에 그쳐서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 등을 막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다.

투쟁으로 쌓아 온 성과

사측의 공격은 현대차 노조 지도부가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중도사퇴하게 된 틈을 이용해 노동자들이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계속

투쟁으로 쌓아 온 성과를 허물려는 시도이다. 사측은 지난해에도 임금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주야간 맞교대 방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했다. 다행히 노동자들은 이 방안을 부결시켰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공격은 더 확대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우유를 짤 젖소를 잡아먹는 노조의 탐욕"을 비난하며, 노조의 강경투쟁이 "수만 명의 동료 근로자와 그 가족, 수십만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와 가족들을 찬바람 속에 길거리로 내몰고 말리라"고 저주했다. 하지만 IMF 위기도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이 아니었고, 지금의 한국경제 위기도 부동산 거품과 미국경제 위축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배자들은 기업주들의 탐욕스런 과잉경쟁과 정치인들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이럴 때, 노조가 힘이 없고 양보나 한다면 정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지금 현대차 사측의 공격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있다. 사측은 현대차 비정규직, 기아차 정규직, 기아차 비정규직 모두의 성과급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공격이 성공한다면 사측은 더 다양한 측면으로 공격을 확대할 것이다. 다른 기업주들도 현대차의 사례를 따르려 할 것이다.

선봉부대

최근에 검찰도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비정규직 개악안의 실행을 앞두고 위장 도급을 통한 무제한적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착취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에서부터 이런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차 노조가 저들의 공격을 박살낸다면 다른 기업주들도 공격에 나서길 주춤거릴 것이고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도

비난받아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비리범 정몽구다

자신감을 갖고 공격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투쟁의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사측은 매우 강경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박유기 위원장을 비롯한 22명의 동지들을 고소했고 잔업 · 특근 거부로 인한 손실을 핑계로 26명에게 10억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지도부가 연대 투쟁이 아니라 '중재'에 나선 것은 유감이다. 사측 비난과 함께 '시무식 충돌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현대차 노조에 요구한 것도 잘못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를 허물려는 공격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잔업 · 특근 거부는 단호하게 계속돼야 한다. **12일까지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잔업 · 특근 거부로 수백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엄살을 떠는 사측에게 노동자를 무시하고 댓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급을 삭감당한 현대차 정규직 · 비정규직, 기아차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이 건설돼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 요구도 분명히 해야 한다. 비정규직 불법파견 무혐의 판정에 대한 항의도 결합될 필요가 있다.

수십 년간의 투쟁을 통해 단련되고 조직화된 현대차 노동자들이 아니면 누가 이런 공격을 막아낼 것인가. 민주노총 선봉부대가 2007년 연초를 승리로 장식해야 한다.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에도 맞서야한다

지난 1월 3일 울산지검 공안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행위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미 2년 전에 접수된 사건을 질질 끌어오다가 마침내 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와 경찰조차 인정한 바 있듯이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의 비정규직 고용은 명백히 불법파견이었다. 검찰은 현대자동차 사측과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에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도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순전한 거짓말이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생산라인에서 정규직과 뒤섞여 함께 일하면서 파견업체의 업무지시가 아닌, 현대자동차 측의 지시를 받는다. 라인 생산에서 파견업체의 독자적인 업무지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아무 근거도 없는 정치적 재판에 불과하다. 검찰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있었던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르네상스호텔에서도 무혐의 처분으로 사측에 면죄부를 준 적이 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이라고 결론내린 검찰은 비정규직 차별고용의 합법적 수단으로 파견제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기회에 현대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는 현대차 투쟁에 강력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물론, 불법파견 분쇄투쟁에 적극 나서 비정규연대투쟁의 효과적인 무기임을 입증해 보여야 할 때이다.

주간 〈맞불〉을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정기 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

〈맞불〉은 '다함께'가 발행하는 주간신문입니다.